

전쟁은 왜 시작되고, 무엇으로 변하며, 왜 끝나기 어려워지는가

BOOK PROSE MASTER v0.1

전쟁을 일으킨 문제는 전쟁을 끝내는 문제와 같을 필요는 없다.

VERSION	BOOK PROSE MASTER v0.1 / 2026-09-26
STATUS	FULL-BOOK PROSE MASTER / RESEARCH-LOCKED
SOURCE	부분 작업 아카이브 / 최초 공유대화 RAW 미회수
STRUCTURE	4부 14장 + 프롤로그·에필로그
ACTUAL	48쪽 / 본문 25,980자 / 약 42-60분
NEXT	SOURCE & FOOTNOTE PASS v0.1

4 PARTS	14 CHAPTERS	5 BOUNDARIES	6 PEACE LAYERS
---------	-------------	--------------	----------------

BOOK PROSE MASTER / READING MAP

한 전쟁이 아니라 다섯 경계를 읽는다

베트남은 출발 사례이자 첫 보정점이지만 전권의 중심을 독점하지 않는다. 변화폭의 상한과 하한, 승리 뒤의 질서, 합의 뒤의 위험, 종성 뒤의 평화를 서로 다른 사례가 분담한다.

4 PARTS	14 CHAPTERS	5 BOUNDARIES	6 PEACE LAYERS
------------	----------------	-----------------	-------------------

원인→수행 / 수행→종전 / 승리→질서 / 합의→미래 위험 / 무전쟁→평화의 질

구역	핵심 이동	사례의 역할
1부	원인→선택→승리의 분해	개념 도구
2부	발발→수행→종전	베트남·1차대전·한국전쟁 / 포클랜드·걸프 반례
3부	승리→질서 / 합의→미래 위험	아프간·이라크 / 독일·일본 / 쿠바·냉전 / 뮌헨
4부	무전쟁→평화의 질	보스니아·스페인 / 여섯 평화층

CANONICAL STATUS: BOOK PROSE MASTER v0.1 LOCKED

RAW SOURCE STATUS: NEEDS SOURCE

PUBLICATION STATUS: HOLD

READER'S NOTE

독자에게

전쟁을 설명하는 책은 대개 시작점으로 돌아간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가. 어떤 동맹과 공포가 위기를 키웠는가. 지도자는 무엇을 오판했는가. 어떤 자원과 지리가 충돌을 불가피하게 했는가. 모두 필요한 질문이다.

하지만 전쟁은 시작된 순간 멈추지 않는다. 사람들이 죽고, 국경과 도시가 무너지고, 동맹의 이해가 갈라지고,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포로·점령·피난·복수·정권생존의 문제가 생긴다. 처음의 목표는 수정되거나 우선순위를 잃는다. 어떤 국가는 전쟁 중 사라지고, 어떤 세력은 뒤늦게 행위자가 된다. 결국 협상장에 놓이는 문제는 개전 직전의 문제와 전혀 다른 모양일 수 있다.

이 책은 바로 그 이동을 추적한다. 전쟁의 원인을 하나 더 발명하려는 책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전쟁사·국제정치·조직론·평화연구의 설명을 긴 시간축 위에 놓고, 각 단계에서 무엇이 다음 단계를 만들었는지를 다시 묻는다.

핵심 문장은 단순하다.

전쟁을 일으킨 문제는 전쟁을 끝내는 문제와 같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문장은 모든 전쟁이 싸우는 동안 완전히 다른 전쟁으로 변한다는 뜻이 아니다. 제1차 세계대전처럼 싸움을 시작한 제국과 정권, 연합, 정치언어가 사라지는 전쟁도 있다. 반대로 포클랜드전쟁이나 1991년 걸프전쟁처럼 제한된 작전목표와 종료 확인점이 비교적 오래 유지된 전쟁도 있다. 중요한 것은 변화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변화가 다음 선택을 바꿀 만큼 컸는가이다.

그래서 이 책은 한 사례를 보편모형으로 삼지 않는다. 베트남은 첫 보정점이고, 제1차 세계대전은 변화폭의 상한이며, 포클랜드와 걸프전쟁은 제한적 하한이다. 한국전쟁은 발발원인과 휴전장치가 갈라지는 과정을 교차검증한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독일과 일본은 군사적 승리에서 정치질서로 넘어가는 경계를 보여준다. 쿠바와 뮌헨은 합의한 날과 그 합의가 만들어진 미래를 분리한다. 보스니아와 스페인은 총성이 멈춘 뒤에도 평화의 시간이 하나가 아님을 드러낸다.

독자가 끝까지 붙들 질문은 다섯 가지다.

1. 원인은 언제 수행의 논리와 갈라지는가.
2. 수행의 논리는 언제 종전을 막는 문제와 갈라지는가.
3. 승리는 왜 질서를 자동으로 만들지 못하는가.
4. 합의는 당장의 전쟁을 피하고도 미래 위험을 키울 수 있는가.
5. 전쟁이 없다는 것과 좋은 평화는 왜 같지 않은가.

이 다섯 경계를 건널 때마다 우리는 같은 주의를 지켜야 한다. 비유는 동일성이 아니다. 군사적 승리는 정치적 승리와 같지 않다. 휴전은 전후질서와 같지 않다. 전쟁의 부재는 자유·정의·화해와 같지 않다.

PROLOGUE

프롤로그

전쟁을 일으킨 문제는 언제까지 그 전쟁을 설명하는가

1997년 하노이에서 베트남전의 옛 당사자와 연구자들이 다시 만났다. 회담은 훗날 ‘농진 기회’를 되짚는 자리로 알려졌다. 누가 언제 무엇을 알았고, 어떤 신호를 잘못 읽었으며, 대화가 가능했던 순간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서로 물었다. 이 회담의 세부 기록과 발언은 아직 이 원고의 출판근거로 완전히 잠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하나의 장면만 남긴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당사자들은 시작의 이유만이 아니라 서로가 어떤 전쟁을 하고 있다고 믿었는가를 다시 묻고 있었다.

미국은 압도적인 화력과 동원능력을 갖고 있었다. 수많은 전투에서 상대에게 더 큰 손실을 입혔고, 주요 공세를 격퇴했으며, 원하는 시기에 막대한 군사력을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처음 약속한 정치적 결과를 안정적으로 남기지 못했다. 이 간극을 단순히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설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전투의 성공이 정치적 목표로 변환되려면 여러 문을 통과해야 한다. 적의 군사력을 약화한 결과가 주민의 협조와 동맹정부의 정당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 정부는 외부지원이 줄어도 기능해야 한다. 전쟁을 계속할 국내의 동의가 유지돼야 한다. 상대는 손실을 입고도 목표를 바꾸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시간이 자기 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어느 한 문에서 변환이 막히면 전술적 우세는 정치적 성공이 되지 못한다.

베트남에 들어갈 때 미국이 말한 것은 남베트남의 생존, 공산권 팽창의 억제, 동맹에 대한 약속과 국가의 신뢰성이었다. 나올 때 협상장의 중심에는 미군 철수, 포로 귀환, 남베트남의 생존 가능성, 미국 국내정치, 패배로 보이지 않을 출구가 놓였다. 처음의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음 결정을 만들었는지는 달라졌다.

이 책의 질문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전쟁을 일으킨 문제는 언제까지 그 전쟁을 설명하는가. 그 설명력이 약해진 뒤에는 무엇이 싸움을 계속하게 하고, 무엇이 종전을 막으며, 무엇이 전후질서를 결정하는가. 그리고 총성이 멈춘 뒤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어떤 모습으로 남는가.

우리는 전쟁을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한다. 날짜를 붙이고, 승자와 패자를 정하고, 원인과 결과를 한 문장으로 묶는다. 그러나 전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쟁은 서로 다른 문제가

연속해서 나타나는 과정이다. 국가가 들어간 전쟁과 군대가 싸운 전쟁, 지도자가 끝내려는 전쟁과 동맹이 살아남으려는 전쟁이 같은 이름 아래 겹친다.

그 겹침을 풀기 위해 먼저 전쟁을 보는 오래된 습관부터 해체해야 한다.

PART 01

1부

전쟁을 보는 오래된 습관을 깨다

CHAPTER 01

전쟁에는 왜 원인이 너무 많은가

전쟁이 끝난 뒤 원인을 찾는 일은 폐허 속에서 한 개의 도화선을 찾는 일처럼 보인다. 사라예보의 총성, 국경을 넘은 전차, 조약의 파기, 지도자의 연설이 출발점으로 선택된다. 특정한 순간이 없었다면 전쟁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촉발 사건은 중요하다.

그러나 촉발은 가능조건과 같지 않다. 한 암살이 유럽의 열강을 전면전으로 끌고 가려면 동맹, 동원계획, 공격 우위에 대한 믿음, 제국의 취약성, 민족운동, 지도자의 선택이 결합해야 했다. 한 국경침범이 국제전쟁이 되려면 누가 그것을 어떤 위협으로 분류하고 어떤 공약을 발동했는지가 중요하다. 도화선만 찾으면 왜 같은 종류의 위기가 다른 때에는 전쟁이 되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전쟁 원인이 많아지는 이유는 연구자가 우유부단해서가 아니다. 서로 다른 층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기 때문이다. 물질적 능력과 지리는 무엇이 가능한지를 정한다. 국제체제와 동맹은 위협과 선택공간을 바꾼다. 국내정치와 지도자의 생존은 어떤 비용을 받아들일지를 바꾼다. 조직은 정보를 수집하고 선택지를 실행 가능한 형태로 바꾼다. 기억·명예·민족·희생의 언어는 무엇이 정당한 행동인지 규정한다. 우발적 사건은 그 구조가 실제 행동으로 전환되는 시기와 형식을 바꾼다.

이 층들을 하나의 목록으로 만들면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원인이 너무 많아져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원인의 목록보다 먼저 원인이 맡는 기능을 구분해야 한다.

- 가능조건은 어떤 선택이 열려 있었는지 설명한다.
- 촉발은 왜 그때 움직였는지 설명한다.
- 결정은 누가 어떤 대안 가운데 전쟁을 택했는지 설명한다.
- 확산 메커니즘은 국지적 충돌이 더 큰 전쟁망이 된 이유를 설명한다.
- 지속 메커니즘은 시작의 이유가 약해진 뒤에도 싸움이 계속된 이유를 설명한다.

이 구분은 완벽하지 않다. 실제 역사에서 하나의 요인은 여러 기능을 맡는다. 동맹은 전쟁 가능성을 만들고, 참전을 촉진하며, 종전 때에는 내부 갈등을 낳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쟁의 원인”이라는 한 칸에 모든 것을 넣어서는 안 된다.

문화인류학은 이 지점에서 장식이 아니라 인과의 한 층이 된다. 인간이 집단을 만들고 타자를 경계한다는 사실만으로 전쟁을 설명할 수는 없다. 같은 인간은 교환과 혼인, 의례와 법, 동맹과

중재의 제도도 만든다. 중요한 것은 특정 사회가 누구를 적으로 분류하고, 어떤 죽음을 희생으로 기억하며, 포로·폐자·귀환자를 어떤 정치적 신분으로 대우하는가이다. 이 분류는 비용을 받아들이는 한계와 타협 가능한 선을 바꾼다.

그러므로 전쟁은 인간 본성 하나의 결과도, 국제체제 하나의 결과도 아니다. 그렇다고 모든 설명이 같은 비중으로 참이라는 뜻도 아니다. 사례마다 지배적인 연결은 달라진다. 이 책이 할 일은 가능한 원인을 모두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 어떤 조합이 실제 선택을 만들었는지 추적하는 것이다.

원인이 많다는 사실은 결론이 아니다. 다음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다. 구조가 선택의 공간을 만들었다면, 그 공간 안에서 누가 어떻게 전쟁을 현실화했는가.

CHAPTER 02

구조는 가능성을 만들고, 선택은 전쟁을 현실화한다

역사를 설명할 때 우리는 흔히 필연과 우연 사이를 오간다. 제국경쟁과 군비확장, 안보딜레마가 충분히 깊었다면 전쟁은 필연이었다고 말한다. 반대로 한 지도자의 오판, 잘못 전달된 전보, 우발적 충돌이 모든 것을 바꿨다고 말한다. 두 설명은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질문을 다른 층에서 다룬다.

구조는 선택지가 놓이는 지형이다. 어떤 선택은 값싸고, 어떤 선택은 위험하며, 어떤 선택은 생각조차 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지형이 행위자의 발걸음을 대신 내딛지는 않는다. 동맹이 존재한다고 자동으로 참전하는 것도 아니며, 군비경쟁이 있다고 반드시 선제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다. 지도자와 조직은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위협을 해석하고, 국내의 지지와 정권생존을 계산하며, 실행 가능한 계획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그렇다고 선택을 구조와 분리된 자유의지로 보아서도 안 된다. 지도자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선택을 갖지 않는다. 군대가 준비한 계획, 동맹국이 요구하는 시간, 의회와 관료조직의 저항, 대중에게 이미 약속한 언어가 선택지를 좁힌다. 어떤 결정은 한 개인의 신념에서 나오지만 그 신념이 정책이 되려면 조직과 자원, 명령과 정당성이 필요하다.

우발성도 무지의 다른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발적 사건이 중요하다고 말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를 밝혀야 한다. 무엇이 예상 밖이었는가. 그 사건이 없었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했던 대안은 무엇이었는가. 어느 결정시점에서 경로가 달라졌는가. 이 조건이 없으면 우발성은 설명하지 못한 잔여를 모아놓은 상자가 된다.

구조·선택·우발을 함께 보는 이유는 책임을 흐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책임의 자리를 정확히 찾기 위해서다. 구조가 압박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침공 결정을 내린 행위자의 책임을 없애지 않는다. 반대로 지도자의 도덕적 책임을 밝히는 일이 왜 그 선택이 가능하고 매력적으로 보였는지를 분석하는 일을 대신하지 않는다. 규범판단과 인과설명엔 연결되지만 같은 문장이 아니다.

이 구분은 전쟁이 시작된 뒤 더 중요해진다. 발발 때의 구조가 계속 남아 있어도 전황과 사상자, 동맹 변화, 국내정치가 선택공간을 바꾼다. 처음에는 불가능했던 타협이 가능해질 수 있고, 처음에는 가능했던 후퇴가 정권생존 때문에 불가능해질 수 있다. 전쟁은 고정된 구조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선택이 서로의 조건을 바꾸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책은 원인을 한 번 판정하고 닫지 않는다. 각 단계에서 여섯 가지를 다시 기록한다. 누가 행위자인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군사·경제·정치 상태는 어떠한가. 동맹과 적대관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무엇이 정당한 희생과 출구로 여겨지는가. 그리고 그 시점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지배적 쟁점은 무엇인가.

이 기록법을 이 책에서는 **동적 인과구성**이라 부른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새 보편법칙이 아니다. 전쟁 중 학습, 국내정치, 지도자 생존, 조직관성, 경로의존성, 종전협상에 관한 기존 연구를 한 시간축 위에 배열하는 절차다. 그것의 가치는 새로운 단어에 있지 않다. 서로 다른 문제를 하나의 “전쟁 원인”으로 섞지 않는 데 있다.

CHAPTER 03

승리라는 단어를 해체하다

전쟁에서 가장 익숙한 질문은 누가 이겼는가이다. 그러나 이 질문은 주어와 시점과 기준을 밝히지 않으면 답할 수 없다. 전투에서 상대를 밀어낸 군대가 전략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정권을 무너뜨린 국가가 전후질서를 운영하지 못할 수 있다. 전쟁을 피한 합의가 미래의 공격 유인을 키울 수 있다. 재전쟁이 없는 사회가 자유와 정의를 억압할 수 있다.

그래서 승리를 여섯 층으로 나눈다.

전술적 승리 ≠ 작전적 승리 ≠ 전략적 승리 ≠ 정치적 목표 달성 ≠ 안정적
종전 ≠ 좋은 전후질서

이것은 높은 단계로 차례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다. 각 층 사이에 변환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전술적 성공이 작전적 유리함으로 이어지려면 시간과 공간을 연결해야 한다. 작전적 성과가 전략적 결과가 되려면 상대의 전쟁수행 능력과 의지를 바꾸어야 한다. 전략적 결과가 정치목표가 되려면 원하는 행동이나 질서를 실제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종전은 그 질서를 당사자가 받아들이고 이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변환이 실패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다. 목표가 처음부터 모호하거나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측정 가능한 군사수단이 측정하기 어려운 정치목적을 대신할 수 있다. 전장에서는 이기지만 국내에서 전쟁을 계속할 시간이 소진될 수 있다. 한 동맹의 승리가 다른 동맹의 생존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적의 정권을 제거한 뒤 그것을 대체할 국가기능과 정치연합이 없을 수 있다.

승패는 행위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1973년 파리협정은 미국의 직접전쟁을 끝냈지만 베트남 내부의 전쟁을 끝내지 못했다. 1991년 걸프전쟁은 쿠웨이트 해방이라는 연합군 목표를 달성했지만 이라크와 지역의 장기 질서를 완결하지 않았다. 보스니아의 데이턴(Dayton) 협정은 대규모 전쟁을 멈추었지만 헌정 운영과 시민권의 긴장을 남겼다.

따라서 “누가 이겼는가”를 묻기 전에 네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1. 어느 행위자의 목표인가.
2. 개전목표인가, 전쟁 중 수정된 목표인가.
3. 어느 시점의 결과인가.

4. 군사성과·정치성과·종전·전후질서 가운데 무엇을 평가하는가.

이 구분은 승리라는 말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승리의 실제 범위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쿠웨이트 해방의 성공을 인정하면서도 이후 질서의 문제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전쟁 재발을 막은 협정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자유와 권리의 한계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도구는 갖춰졌다. 다음 네 장에서는 변화폭이 서로 다른 전쟁을 같은 질문으로 읽는다. 베트남은 진입의 이유와 철수의 조건이 갈라지는 사례다. 제1차 세계대전은 싸움을 시작한 세계 자체가 사라지는 상한 사례다. 한국전쟁은 발발원인과 휴전장애의 분리를 보여준다. 포클랜드와 걸프전쟁은 모든 전쟁이 그렇게 크게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례다.

PART 02

2부

전쟁은 싸우는 동안 무엇으로 변하는가

CHAPTER 04

베트남 -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다

1965년 4월 린든 존슨은 미국이 베트남에 있는 이유를 남베트남의 자기결정, 미국의 약속, 더 넓은 국제질서의 신뢰라는 언어로 설명했다. 같은 시기 내부 문서들은 굴욕적 패배의 회피와 보증인으로서 미국의 평판을 더 높은 순위에 놓기도 했다. 어느 하나만 진짜 목표이고 다른 하나는 위장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국가는 전쟁에 들어갈 때부터 여러 목표를 묶고, 기관과 지도자는 그 안에서 서로 다른 항목을 앞세운다.

여덟 해 뒤 파리협정의 언어는 달라져 있었다. 휴전, 미군 철수, 포로 귀환, 남베트남인의 자기결정, 패배의 형식으로 물러나지 않는 출구가 종전의 중심에 놓였다. 남베트남의 생존과 미국의 신뢰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은 무기한 주둔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아니라 철수의 속도와 형식을 정하는 조건이 됐다.

1965년의 질문은 왜 들어가야 하는가였다. 1973년의 질문은 어떤 조건이면 나올 수 있는가였다. 이 차이는 전쟁목표가 하루아침에 교체됐다는 뜻이 아니다. 목표 묶음의 우선순위와 최소수용선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숫자가 번역하지 못한 것

베트남에는 점령해야 할 하나의 수도나 돌파해야 할 고정 전선이 분명하지 않았다. 적은 국경 너머에서 보급됐고, 정규군과 게릴라 조직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 한 촌락의 안전은 낮과 밤에 달라질 수 있었다. 전투에서 적을 밀어냈다는 사실과 남베트남 정부가 지속적인 통치력을 확보했다는 사실도 같지 않았다.

측정은 불가피했다. 군대는 병력과 탄약을 배치해야 했고 워싱턴은 전쟁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설명해야 했다. 사상자, 무기 회수, 탈영, 평정, 부대 효율, 지휘관 평가 등 수많은 자료가 수집됐다. 베트남전이 오직 사망자 수 하나로 운영됐다는 통념은 실제 측정체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문제는 숫자의 존재가 아니라 숫자와 정치목표 사이의 연결이었다. 적의 손실이 늘면 남베트남 정부의 정당성이 커지는가. 평정 등급이 오르면 미군 지원이 줄어도 그 상태가 유지되는가. 중간 변화가 최종 목적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합의하지 못하면 측정 가능한 수치가 측정하기 어려운 목적을 대신한다. 숫자는 거짓이 아니어도 전략을 오도할 수 있다.

철수기의 남베트남군 평가도 같은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계획된 병력과 장비를 갖췄다는 사실은 미국의 공중·재정·병참 지원이 줄어든 뒤에도 임무를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과 같지

않았다. 법적 설치, 현재 작동, 외부지원 아래의 능력, 지원 축소 뒤의 지속성은 서로 다른 측정층이었다.

Tet이 한 화면에 모은 모순

1968년 Tet 공세에서 공산측은 기대했던 도시 장악과 대중봉기를 이루지 못했고 큰 손실을 입었다. 전술과 작전의 기준으로 공세가 계획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격의 규모와 기습성은 미국 정부가 제시한 진전의 서사와 충돌했다. 남베트남의 도시와 행정체계가 공격받았다는 사실은 정보판단, 추가 병력, 전쟁비용, 행정부 설명의 신뢰성을 동시에 다시 묻게 했다.

공산측의 군사적 손실과 미국 측의 정치적 충격은 모순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평가층의 결과였다. 추가 병력은 당장의 압박을 높일 수 있었지만 전쟁을 더 미국화하고 남베트남의 자립을 늦출 수 있었다. 전술적으로 가능한 선택이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는 별개였다.

Tet을 모든 변화의 단일 원인으로 만들 필요도 없다. 미국 사회의 의심과 행정부 내부의 회의, 사상자와 재정부담은 이미 쌓이고 있었다. Tet은 없던 위기를 창조했다기보다 이미 갈라진 전장성과와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한 장면 안에 모았다.

승리전략이 출구정책이 될 때

닉슨 행정부가 추진한 베트남화는 미군 자리에 남베트남군을 한 명씩 넣는 교대가 아니었다. 전투 책임, 요구되는 능력의 기준, 철군 시간표, 협상 지렛대가 함께 이동해야 했다. 미군의 감축은 미국 국내에서는 정책의 진전이었지만 사이공에는 보호자의 축소였고, 하노이에는 미국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신호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베트남화의 성공 여부는 한 질문으로 판정할 수 없다. 남베트남군이 미군 임무를 얼마나 대신했는가. 지원이 줄어든 뒤에도 지속할 수 있었는가. 철수가 협상조건을 개선했는가. 미국 국내의 전쟁비용을 얼마나 낮췄는가. 한 질문의 성공이 다른 질문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았다.

하노이는 다른 시간표를 사용했다. 장기적인 통일 목표와 미군 철수 요구를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공세, 장기전, 협상, 선전을 조합했다. 그 판단이 언제나 정확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협상은 전투의 반대가 아니었다. 전장의 압력을 정치적 양보로 바꾸는 수단이었다.

사이공의 시간은 또 달랐다. 미국의 철수는 자립의 기회이자 국가와 정권의 생존 위기였다. 북베트남군이 남부에 남고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가 정치주체로 인정된다면 휴전은 적의

기반을 현 위치에 고정할 수 있었다. 미국에 철수와 포로 귀환은 명확한 성과였지만 남베트남에는 합의 뒤 계속될 권력경쟁이 남았다.

동맹은 같은 적을 상대해도 종전의 최소조건까지 같지 않다. 강대국은 동맹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들어가지만, 전쟁에서 나오기 위해 동맹에게 더 큰 위협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할 수 있다.

파리협정과 종전의 주어

1973년 파리협정은 두 종류의 과제를 담았다. 첫째는 미군 철수와 포로 귀환처럼 행위자·기한·행동이 비교적 분명한 과제였다. 미국 정부는 자국 군대에 철수를 명령할 수 있었고, 포로 교환은 명단과 일정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는 남베트남의 선거·자기결정·정치적 화합·군축·평화통일처럼 적대세력의 지속적 협력에 의존하는 과제였다. 어느 한 정부의 명령만으로 완성할 수 없었고, 영토통제·무장조직·외부지원·위반 제재가 모두 연결됐다.

협정은 미국의 직접전쟁을 끝내고 포로를 귀환시키는 장치로 작동했다. 그러나 베트남 내부의 무장경쟁과 국가의 미래를 끝내는 장치로는 훨씬 약했다. 무엇을 끝냈는지 묻는다면 성공의 범위가 보이고, 누구의 전쟁을 끝냈는지 묻는다면 한계가 보인다.

미국은 전쟁에서 빠져나왔지만 베트남은 아직 전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한 행위자의 종전은 전체 전쟁망의 종전이 아니었다.

CHAPTER 05

제1차 세계대전 - 싸움을 시작한 세상이 사라질 때

1914년 7월 오스트리아-헝가리는 세르비아의 전복활동을 멈추고 제국의 권리와 이익을 지킨다는 언어로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국지적 강압 문제만으로 러시아·독일·프랑스·영국의 동원과 참전, 식민지와 해상의 전쟁을 설명할 수는 없다. 세르비아 문제와 동맹, 동원, 공격계획, 전략적 불안이 결합하면서 전쟁망이 확대됐다.

전쟁 발발 뒤 독일의 9월 각서는 프랑스 일부의 병합과 배상, 벨기에의 종속, 중부유럽 경제질서를 구상했다. 이 문서는 두 극단을 막는다. 1914년에는 누구도 큰 목표를 갖지 않았다는 말은 틀리다. 반대로 전쟁 뒤 특정 군사상태에서 작성된 문서를 모든 독일 행위자가 전쟁 전부터 공유한 완성 청사진으로 소급해서도 안 된다. 초기 목표는 복수였고, 전황과 기관전쟁 속에서 구체화되고 확대됐다.

연합은 미래의 자산을 약속했다

장기화된 전쟁에서 신규 참전은 병력만 더하지 않았다. 1915년 런던조약에서 이탈리아는 연합국 편이 참전 대가로 광범위한 영토 약속을 받았다. 러시아의 해협 요구, 중동을 둘러싼 영국과 프랑스의 이해, 루마니아 참전 조건도 연합정치 안에 들어왔다.

전쟁이 스스로 쟁점을 낳았다고 의인화할 필요는 없다. 교착된 연합이 새 행위자의 참여를 얻기 위해 미래의 영토와 영향력을 교환했고, 그 약속이 승리 뒤 해결할 의무와 충돌을 늘렸다. 전쟁의 쟁점 증식이 있다면 그 메커니즘은 막연한 전쟁의 생명력이 아니라 연합 유지의 계약이었다.

동원과 희생 역시 한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미 치른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다”는 말은 더 큰 승리와 보증을 요구할 수 있었다. “더 이상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말은 무병합 평화와 협상을 요구할 수 있었다. 희생은 목표를 자동 확대하지 않았다. 어떤 평화가 정당한지를 둘러싼 국내정치의 제약과 언어를 바꾸었다.

1917년, 들어온 행위자와 나간 행위자

1917년 미국은 무제한 잠수함전과 중립국 권리 침해를 이유로 참전했다. 미국은 중립 중재자에서 교전국이 되었고, 병력·금융·생산능력이 연합국의 미래 선택지에 들어왔다. 동시에 민주주의와 국제질서의 언어는 뒤의 종전협상에서 준거가 됐다.

같은 해 러시아에서는 제정이 무너지고 임시정부를 거쳐 볼셰비키 정권이 등장했다. 평화포고는 무병합·무배상 평화와 비밀외교의 폐기를 주장했다. 1918년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은 러시아의 전쟁이탈을 제도화했지만 광범위한 철군과 영토·국가승인 조건을 포함했다.

전쟁이 러시아혁명을 무에서 만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전전 국가의 취약성, 계급갈등, 민족운동, 혁명조직이 이미 존재했다. 확인되는 것은 전쟁조건과 기존 취약성이 결합해 핵심 행위자 하나의 정권·대표·목표·동맹지위를 바꾸었다는 사실이다.

1917년은 단일한 전환점이 아니라 반대 방향의 동시 전환이었다. 미국의 능력은 시간차를 두고 연합국에 더해졌고, 러시아의 이탈은 독일에 동부전선의 여지를 주었다. 결과를 알고 보면 연합국 승리가 필연처럼 보이지만 당시 선택공간에는 서로 반대되는 변화가 함께 들어 있었다.

같은 평화라는 말, 다른 질서

1918년 초 윌슨의 14개조와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은 모두 평화를 말했지만 같은 평화를 의미하지 않았다. 전자는 공개외교·군비축소·점령지 철수·민족의 정치적 발전·국제연맹을 일반질서의 프로그램으로 제시했다. 후자는 동부전선의 적대를 즉시 끝내는 대신 강한 철군·승인·점령 조건을 부과했다.

정치언어를 선전으로만 치울 수 없는 이유는 독일 정부가 1918년 10월 윌슨의 원칙을 실제 휴전협상의 기초로 호출했기 때문이다. 그 언어는 상대가 기대할 수 있는 출구를 제시했고, 누가 독일을 대표하며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지 묻게 했다. 다만 언어가 전황과 봉쇄, 국내혁명보다 더 결정적이었다는 뜻은 아니다.

1918년의 문제는 사라예보가 아니었다

1918년 가을 불가리아, 오스만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가 차례로 휴전에 들어갔다. 독일의 동맹과 전략공간은 줄어들었다. 독일 지도부가 마주한 문제는 더 이상 세르비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아니었다. 서부전선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가, 어떤 조건으로 점령지를 철수할 것인가, 군의 전쟁 재개능력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누가 정부를 대표하고 약속을 보증할 것인가가 종전의 중심이었다.

11월 휴전조건은 점령지 철수, 무기·함정 인도, 라인강 좌안과 교두보 점령, 브레스트-리토프스크 포기, 봉쇄 유지와 감시를 규정했다. 이것은 1914년 발발원인의 해결문서가 아니라 패배한 독일이 단기간에 전쟁을 재개할 수 없도록 상태를 바꾸는 문서였다. 국경·배상·국가승계·국제기구의 문제는 강화회의로 넘어갔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싸움을 시작한 세상과 끝내야 하는 세상은 분명 달랐다. 미국은 새 교전국이 되었고 러시아는 다른 정권 아래 전쟁에서 이탈했다. 제국이 무너지고 새 정치단위가 등장했다. 그러나 이 사례를 모든 장기전의 모형으로 만들 수는 없다. 세계대전은 변화폭의 상한이다. 다음 장의 한국전쟁은 국가체제가 대체로 남아 있어도 종전의 병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CHAPTER 06

한국전쟁 – 발발 원인과 휴전 장애가 갈라질 때

1950년 6월의 북측 공격은 전쟁을 시작한 직접 사건이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공격 중지하고 38선 이북 철수를 요구했다. 이 문서는 발발 직후 국제사회의 대응을 보여주지만 북한·소련·중국 지도부의 전쟁 전 계산 전체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전쟁목표는 곧 여러 층으로 갈라졌다. 1950년 10월 유엔총회는 통일·독립·민주정부와 전후 부흥을 목표로 제시했다. 중국 개입 뒤 미국 정책문서와 트루먼의 공개 발언은 당장의 휴전과 확전 회피, 방어 가능한 남측 경계, 장기적인 통일 목표를 구분했다. 통일 목표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군사목표와 궁극적 정치목표가 병존했다.

이 차이를 “목표가 남침 저지에서 통일로, 다시 원상복구로 바뀌었다”는 한 줄로 쓰면 행위자와 제도 층을 지워버린다. 유엔총회와 미국 행정부, 대한민국 정부, 북한과 중국은 같은 전쟁 안에서도 목표와 최소수용선이 달랐다.

포로가 종전의 병목이 되다

1952년 휴전협상에서 포로송환은 잔여 핵심쟁점으로 올라왔다. 문제는 누가 포로를 소유하는가가 아니라 포로를 어떤 신분으로 분류하는가였다. 국가는 모든 포로를 반드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가. 귀환을 거부하는 개인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가. 그 의사가 강압 없이 형성됐는지를 누가 확인할 것인가.

유엔군사령부는 비강제송환 원칙을 고수하며 면담·중립국·적십자 등의 절차를 제시했다. 북한과 중국 측은 이를 사실상의 포로 억류라고 비판했다. 1953년에는 직접 송환되지 않는 포로를 중립국 기구가 관리하고 설명 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안이 구체화됐다. 최종 협정은 귀환을 요구하는 포로의 직접 송환과 나머지 포로의 중립국 송환위원회 인계를 구분했다.

1950년 전쟁을 시작한 것은 포로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1952년 협상장에서 포로의 신분과 송환 방식은 전투를 멈추기 위한 독립된 병목이 됐다. 그렇다고 포로 하나가 모든 전투 지속을 설명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전선의 교착, 군사비용, 공산권 내부정치, 미국의 압박, 각 동맹의 이해가 함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이 바뀌었다는 선언이 아니라 발발을 설명하는 문서와 후반 협상을 막는 문서가 서로 다른 문제를 기록한다는 사실이다.

문화인류학적 층도 여기에서 구체적이다. 포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국가가 회수해야 할 구성원인지, 정치적 선택이 가능한 개인인지, 배신자·망명자·피해자 가운데 무엇으로 분류되는지가 국제법과 선전, 수용소의 강제, 협상조건을 바꾸었다. 사람의 신분 분류가 종전의 물리적 조건이 된 것이다.

같은 편도 같은 종전을 원하지 않았다

1953년 6월 이승만 정부의 협조 아래 송환을 거부한 북한 포로들이 수용소에서 풀려났다. 미국은 강하게 항의했고 협상 절차는 흔들렸다. 이승만은 통일과 중국군 철수, 한국군 증강, 재건과 안전보장을 요구했다. 7월에는 통일과 중국군 철수를 휴전 이전의 절대조건으로 고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한국 정부는 협정에 서명하지 않고, 국가생존을 해치지 않는 한 방해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은 동맹이 종전 선호까지 일치하는 단일행위자가 아님을 보여준다. 미국과 유엔군사령부에는 휴전이 확전을 막는 성과였지만 대한민국 정부에는 통일을 미루고 미래의 안전을 외부 약속에 맡기는 위험이었다. 다만 포로 석방이 휴전을 정확히 며칠 늦췄는지, 없었다면 어떤 날짜에 합의됐을지는 반사실 없이 말할 수 없다.

휴전이 해결하지 않은 것

1953년 7월 협정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감독과 포로처리 절차를 만들었다. 외국군 철수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후속 정치회담에 넘겼다. 서명된 것은 군사적 적대행위의 정지이지 통일의 달성이나 평화조약의 체결이 아니었다.

한국전쟁은 발발원인·전쟁목표·지배적 쟁점·종전조건을 분리해 기록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1950년의 설명으로 1953년의 휴전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 동시에 1953년의 포로문제로 1950년의 전쟁 전체를 다시 쓸 수도 없다.

CHAPTER 07

바뀌지 않는 목표도 있다

지금까지의 사례만 읽으면 전쟁은 싸우는 동안 반드시 다른 전쟁이 된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포클랜드전쟁과 1991년 걸프전쟁은 그 과장을 막는다. 두 전쟁에서 특정 행위자의 제한된 작전목표는 군사적 정지점까지 비교적 유지됐다. 그러나 이것도 전쟁 전체가 변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포클랜드 - 작전목표의 지속과 분쟁의 지속

1982년 영국 정부는 아르헨티나군을 섬에서 철수시키고 영국 행정을 회복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6월 현지 아르헨티나 병력의 항복으로 그 작전목표는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달성됐다.

하지만 현지 병력의 항복과 남대서양 전체의 적대 중단은 같은 사건이 아니었다. 영국 정부도 아르헨티나가 일반적 적대 중단을 확인하는지를 별도로 물었다. 전쟁 뒤 유엔총회는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 재개를 요청했다. 섬의 군사·행정 통제는 바뀌었지만 영유권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따라서 포클랜드는 ‘바뀌지 않은 전쟁’이 아니다. 영국의 특정 작전목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 전쟁이다.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의 동시대 판단과 목표는 영국 자료만으로 대신할 수 없다.

걸프전쟁 - 해방, 공세 중지, 정식 휴전

1990년 미국은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철수와 쿠웨이트 정부 복귀를 명시했다. 동시에 걸프의 안보와 안정이라는 더 넓은 목표도 제시했다. 1991년 지상전의 직접 임무는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내는 것으로 비교적 분명했다.

2월 27일 쿠웨이트 해방과 공세 중지가 선언됐지만 그것이 곧 정식 휴전은 아니었다. 포로와 억류자, 기뢰 정보, 병합 철회, 배상과 유엔 결의 준수가 후속 조건으로 남았다. 유엔 안보리 결의 687은 경계·감시·무장해제·사찰·배상·제재의 장기체계를 만들었고, 이라크의 수락을 정식 휴전과 연결했다.

쿠웨이트 해방이라는 군사목표는 달성됐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한목표의 성공을 지워버린다. 그러나 공세 중지, 정식 휴전, 지역의 장기질서를 한 날짜로 합치면 전후에 남은 문제를 지워버린다.

반례가 가르치는 것

두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하다. 일부 전쟁에서는 한 행위자의 제한된 작전목표가 군사적 정지점까지 비교적 유지된다. 그 경우에도 전체 적대의 종료와 전후질서는 따로 검증해야 한다.

전쟁의 짧은 기간이 목표 안정의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힘의 비대칭, 행위자 수, 확전 통제, 승리 속도가 각각 얼마나 중요했는지도 두 사례만으로 분리할 수 없다. 반례의 역할은 성공공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심명제의 범위를 좁히는 데 있다.

2부의 결론은 “전쟁은 변한다”가 아니다. 전쟁마다 무엇이 얼마나 변했고, 어떤 층은 유지됐으며, 그 차이가 종전과 전후질서에 무엇을 남겼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적 목표가 달성된 뒤에도 질문은 끝나지 않는다. 상대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적대를 멈춘 다음, 누가 질서를 운영할 것인가. 이제 승리에서 질서로 넘어가는 경계를 보아야 한다.

PART 03

3부

승리 뒤의 질서와 합의 뒤의 위험

CHAPTER 08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 정권을 무너뜨린 뒤

2001년 아프가니스탄과 2003년 이라크에서 미국과 동맹군은 상대 정권을 빠르게 무너뜨렸다. 이 속도는 군사력의 압도적 차이를 보여주었다. 동시에 정권 제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전쟁의 새로운 중심문제가 되는 순간도 보여주었다.

정권과 국가는 같지 않다. 정권은 통치권을 장악한 지도부와 정치연합이다. 국가는 법·관료제·치안·재정·서비스·지방행정처럼 사회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조직과 능력의 집합이다. 정권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군대가 국가기능을 보존·재편하고 정당한 정치경쟁을 만드는 데 자동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 구분만으로 두 전쟁의 실패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지는 달라진다. 누가 제거됐는가. 어떤 법과 기관이 남았는가. 무엇을 새로 설치했는가. 설치된 제도는 실제로 작동했는가. 외부 병력과 재원이 줄어든 뒤에도 지속됐는가.

이라크 - 명령의 내용과 결과 사이

이라크의 연합임시행정처 규정은 점령당국이 정부권한을 행사하면서 폐지되거나 대체되지 않은 기존 법률을 조건부로 존속시켰다. 동시에 탈바트당화 명령은 고위 당원의 공직 배제와 상위 관리층 조사를 정했고, 조직해산 명령은 국방부·정규군·정보기관 등을 명시해 해산했다.

이 문서들은 정권을 제거한 뒤 인력과 국가기관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실제 정책선택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명령문만으로 반란의 원인을 확정할 수는 없다. 치안공백과 약탈, 점령의 정당성, 전전 국가구조, 종파정치, 실업과 무장인력, 지역세력, 외부 개입이 함께 작동했다. “두 명령이 반란을 만들었다”는 한 줄은 복잡한 집행과 시기별 차이를 지운다.

반대로 이라크 국가 전체가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일부 부처와 서비스는 계속 작동했고, 다른 기능은 치안과 인력, 예산집행의 문제로 심하게 제약됐다. 법상 기관의 존재, 현장 서비스, 부처의 집행능력, 군과 경찰의 군수 지속성을 따로 보아야 한다.

이라크 침공의 명분과 반란이 지속된 이유 역시 같은 문제가 아니다. 대량살상무기, 정권위협, 테러와 국제질서에 관한 개전 논쟁으로는 점령 뒤 누가 치안을 제공하고 어떤 정치연합이 새 국가를 소유할지를 설명할 수 없다. 전쟁이 정권 붕괴에 성공한 바로 그 순간, 승리의 기준이 국가운영 능력으로 이동했다.

아프가니스탄 - 출범과 지속 사이

2001년 본 협정은 임시당국과 이후 제도 재건의 경로를 정했다. 그것은 전쟁 뒤 정치절차를 시작하는 중요한 문서였다. 그러나 제도 출범은 역량의 완성을 뜻하지 않았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 지역 무장세력, 외부지원, 행정과 재정의 기반은 균질하지 않았다.

뒤의 기관평가들은 아프가니스탄 안보세력과 관련 부처가 재정·지도력·군수·전문인력에서 외부 지원에 크게 의존했음을 보여주었다. 병력 수와 훈련 이수, 장비 지급은 필요한 정보였지만 지원 축소 뒤의 지휘·보급·정치적 충성까지 보장하지 않았다.

2001년 협정과 2021년 붕괴를 직전으로 연결하면 그 사이 스무 해의 정책·전장·지역정치가 사라진다. 이 원고는 붕괴의 충분원인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설치된 제도와 외부지원 아래의 유효능력, 지원이 줄어든 뒤의 자립적 지속성이 다른 평가항목이라는 점을 잠근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같은 국가건설 실패로 묶으면 비교는 쉬워지지만 설명은 약해진다. 이라크의 첫 질문은 이미 존재한 법·부처·군 가운데 무엇을 해체하고 유지했는가였다. 아프가니스탄의 첫 질문은 새로 설치한 중앙제도가 지역 통치와 재정·군수의 지속능력으로 이어졌는가였다. 전전 국가구조와 점령정당성, 지역정치도 달랐다.

목표가 열려 있을 때

대테러, 안정, 민주주의, 국가건설 같은 목표는 정치적으로 중요하지만 종료점을 스스로 알려주지 않는다. 무엇을 언제 확인하면 임무가 끝나는지 중간단계로 분해하지 못하면 성공의 기준은 계속 이동할 수 있다. 테러조직의 제거가 정권교체로, 정권교체가 국가건설로, 국가건설이 반란진압으로 이어질 때 전쟁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할수록 다음 목표를 열 수 있다.

그러나 “추상목표는 반드시 끝없는 전쟁을 만든다”는 법칙은 아직 성립하지 않는다. 목표의 모호성 외에도 위협의 변화, 동맹의 요구, 현지정치, 매몰비용이 작동한다. 안전한 결론은 더 좁다. 정치목표를 검증 가능한 중간상태로 번역하지 못하면 종전조건을 합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군사적 강제는 정권을 무너뜨리고 행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질서를 운영할 조직과 자원, 현지의 정치연합, 폭력 없는 경쟁의 규칙을 자동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CHAPTER 09

독일과 일본 - 왜 어떤 재건은 달랐는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만 보면 정권교체와 점령은 본질적으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독일과 일본은 그 결론을 막는다. 두 나라에서도 정권과 군사조직이 무너지고 외부 점령이 이루어졌으며 정치제도가 크게 바뀌었다.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와 제도적 경쟁이 형성됐다.

그렇다고 독일과 일본을 성공공식으로 만들 수는 없다. 패배의 형태, 전전 국가역량, 살아남은 관료제, 점령방식, 사회구조, 국경, 냉전의 안보환경이 달랐다. 두 나라 서로도 같지 않았다.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남았는가

독일에서는 나치 정권과 군사조직이 해체됐고 중앙정부가 곧바로 존속하지 않았다. 연합국은 점령구역별로 최고권한을 행사했다. 포츠담의 원칙은 비무장화와 나치 조직의 해체를 요구하는 동시에 지방자치의 복원, 필수 중앙 행정부문과 행정기구의 설치·복원을 규정했다. 모든 국가기능을 그대로 보존한 것도, 모든 것을 무에서 만든 것도 아니었다.

일본에서는 천황과 일본 정부의 권한이 연합군 최고사령관에 종속됐지만 정부 자체가 즉시 사라지지는 않았다. 점령 지휘문은 가능한 한 일본 정부를 통해 통제하고 필요할 때 직접 행동할 권한을 남겼다.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간접 통제와 강력한 외부권한이 결합했다.

따라서 정권의 전복과 통치역량의 전면 폐기는 동의어가 아니다. 어느 인력과 기관을 숙청하고, 무엇을 유지하며, 어떤 법과 정치경쟁을 새로 만들 것인지는 각각 선택해야 한다.

결정적 패배는 충분한 설명인가

독일과 일본의 항복과 비무장화는 사실이다. 패전정권의 복귀 가능성과 조직적 전쟁 지속의 기대도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결정적 패배가 저항 감소와 민주적 재건을 얼마만큼 만들었는지는 별도 비교가 필요하다. 패배만으로 충분했다면 모든 패전국에서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전전 관료제와 교육수준, 도시와 산업의 구조, 점령군의 통제력, 주민의 선택, 냉전 아래의 외부안보와 시장 접근이 서로 결합했다. 독일은 분할과 동서의 다른 체제를 겪었고 일본은 기존 정부를 경유한 점령 아래 새 헌정질서를 만들었다. “결정적 패배가 평화를 만들었다”거나 “기존 국가역량이 성공을 보장했다”는 단일 설명은 두 사례의 차이도 지워버린다.

투입보다 변환을 본다

전후 재건을 돈과 병력의 규모로만 비교하면 베트남의 측정 오류가 다른 형태로 반복된다. 자원은 필요할 수 있지만 투입은 결과가 아니다. 법과 조직이 설치됐는가. 시민과 지방정부가 실제로 접근할 수 있었는가. 치안과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외부지원이 줄어도 유지됐는가. 패자가 제도 안에서 경쟁할 수 있었는가를 따로 봐야 한다.

외부제도는 빈 땅에 놓이지 않는다. 기존 행정기구, 정당과 노동조직, 지방정치, 기업과 관료, 가족과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작동한다. 그렇다고 현지 정치재료가 좋을 때만 성공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어떤 요소가 효과를 얼마나 만들었는지는 국가와 시기별 검증이 필요하다.

독일과 일본이 주는 가장 안전한 교훈은 성공의 비법이 아니다. 정권교체·점령·재건 자체가 실패의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반례다. 군사적 승리 뒤 질서가 생기려면 기존 능력의 처리, 외부권한, 현지의 정치재료, 안보환경과 지속 가능한 경쟁규칙을 함께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질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적을 완전히 패배시켜야 하는가. 다음 장은 반대의 경로, 곧 상대를 파괴하지 않고 적대를 낮추는 경우를 본다.

CHAPTER 10

상대를 파괴하지 않고도 적대를 끝낼 수 있는가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미국과 소련은 상대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 핵전쟁의 문턱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은 흔히 지도자의 침착함과 상호양보의 성공으로 기억된다. 그 설명에는 진실이 있지만 실제 거래는 더 복잡했다.

흐루쇼프는 미국의 쿠바 불침공과 소련 무기 철수를 연결했다. 다음 서신에서는 쿠바와 터키의 미사일 제거를 상호안으로 제시했다. 케네디의 공개 답신은 소련 공격무기의 제거, 유엔 관찰, 미국의 해상 격리 해제와 불침공 보장에 집중했고 터키 문제는 공개하지 않았다. 비공개 접촉에서는 수개월 뒤 터키의 주피터 미사일을 처리하겠다는 시간표가 전달됐다.

상대가 물러날 수 있는 형식은 합의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체면을 살려주면 위기가 풀린다”는 공식은 아니다. 공개 교환과 비공개 양보, 미국의 군사압력과 시간제한이 함께 있었다. 어느 요소가 더 결정적이었는지는 반사실 없이 확정할 수 없다.

이행됐지만 완결되지 않은 합의

쿠바의 핵심 물리행동은 실행됐다. 소련의 미사일과 폭격기는 철수했고 미국은 해상 격리를 끝냈다. 하지만 쿠바 정부는 소련의 결정에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발했고 자국 영토의 유엔 현장검사를 거부했다. 카스트로는 봉쇄와 전복활동, 망명세력의 공격, 영공·영해 침해, 관타나모 기지를 포함한 더 넓은 조건을 제시했다.

위기는 포괄적 최종문서 하나로 닫히지 않았다. 공격무기의 제거는 정찰과 운송 관찰로 확인됐지만 쿠바 영토의 현장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불침공 보장은 위기 해소의 일부였지만 정식 조약의 무조건적 보장으로 고정되지 않았다. 터키 미사일은 제거됐지만 비공개 거래는 동맹 협의와 사후 서사의 비대칭을 남겼다.

따라서 쿠바는 완전한 검증과 포용의 모범이 아니다. 더 정확한 평가는 핵심 물리행동은 확인됐지만 정치적 종결은 부분적이고 비대칭적이었다는 것이다.

위기 뒤의 규칙

1963년 미국과 소련은 비상시 직접 통신망 설치에 합의했고, 미국·소련·영국은 대기권·우주·수중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위기의 통신 혼선과 핵전쟁 위험은 새 규칙의 필요를 극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시간상 뒤에 생긴 제도가 모두 쿠바 위기의 단독 산물은 아니다. 핵 상호취약성, 기존 군축협상, 국내정치, 기술적 검증 가능성이 함께 작동했다. 위기가 적대를 강화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관리 규칙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설은 남지만, 보편법칙으로 승격할 수는 없다.

냉전은 어느 날 끝나지 않았다

수십 년 뒤 냉전의 종결도 상대의 항복 한 번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1987년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은 특정 지상발사 미사일의 제거와 통보·현장사찰을 규정했다. 고르바초프는 병력 감축과 방어적 재구성을 공개했다. 몰타 정상회담에서 양측 지도자는 적대의 한 시대에서 다른 관계로 이동한다고 말했지만 장기 평화의 완성을 선언하지는 않았다. 1990년 파리헌장은 유럽의 대결과 분할 시대의 종결과 협력원칙을 문서화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자 기존 위협 일부는 사라졌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카자흐스탄에 분산된 핵무기의 지휘·통제와 조약승계라는 새 문제가 생겼다. 적의 붕괴는 자동으로 더 나은 안보를 만들지 않는다. 그렇다고 소련 해체가 서방의 안보를 악화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붕괴는 위협을 없애는 동시에 다른 종류의 관리 문제를 만들 수 있다.

패배 없는 적대 완화에 공식은 없다. 상대의 최소수용선, 확인 가능한 행동, 통신, 이행조직, 제3자의 권리와 비용, 합의 뒤 공격 유인을 함께 보아야 한다. 이것은 성공조건의 목록이 아니라 다음 장에서 합의를 검증할 질문들이다.

CHAPTER 11

타협은 언제 평화를 만들고 언제 위험을 미루는가

타협을 옹호하는 쪽은 전쟁을 피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비판하는 쪽은 양보가 상대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두 주장 모두 때로 맞고 때로 틀리다. 타협은 하나의 행위명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드는 계약이다.

평가는 여섯 시점으로 나누어야 한다. 합의 전 위협과 최소선, 공개·비공개 거래와 배제된 당사자, 즉시 이행, 능력과 동맹의 변화, 후속 요구, 남은 제도다. 서명한 날 폭력이 멈췄다는 성과가 그 뒤의 위협을 대신할 수 없다.

뮌헨에는 검증이 없었던가

1938년 뮌헨협정은 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가 서명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자국 영토를 이전하는 원협정의 서명자가 아니었다. 협정은 주테텐 지역의 단계적 철수와 독일 점령, 시설 보존, 국제위원회의 구역 확정과 주민투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따라서 뮌헨에는 이행과 검증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말은 틀리다. 국제위원회는 철수·점령·경계 같은 물리행동을 다뤘다. 문제는 무엇을 검증했는가였다.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수록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와 방어조건이 바뀌었다. 독일의 미래 의도와 추가 팽창을 물리적으로 검증하는 장치는 아니었다.

쿠바와 뮌헨을 “검증 대 신뢰”로 나눌 수 없는 이유도 같다. 쿠바에서도 불침공 보장과 장기 의도의 일부는 완전히 검증할 수 없었다. 두 합의 모두 확인 가능한 행동과 확인하기 어려운 의도를 함께 담았다. 차이는 검증의 존재보다 검증대상, 합의 뒤 힘의 이동, 후속 요구에 있었다.

순진한 개인의 실패라는 이야기

책임벌린 정부는 즉각적인 유럽전쟁 회피를 중시했다. 협정 뒤에도 영국 재무장을 계속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장기 평화에 대한 기대와 시간을 벌려는 방위예산이 함께 있었다. 이를 개인의 비겁함이나 무지 하나로 설명하면 당시 선택지와 군사적 제약이 사라진다.

그러나 1939년 3월 독일은 보헤미아와 모라비아를 점령했다. 사후 결과는 뮌헨이 독일의 후속 영토요구를 달지 못했고 체코슬로바키아 잔여국가를 보존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우리가 1939년을 안다는 이유로 1938년 모든 행위자의 판단을 자동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구가 종결 가능한가”는 중요한 질문이지만 사전에 쉽게 판별되는 성질은 아니다. 요구의 종결성, 종결형 타협, 연기형 타협 같은 표현을 새 이론으로 만들면 사후편향을 개념으로 포장하게 된다.

누가 시간을 벌었는가

뮌헨은 유럽전쟁을 약 열한 달 미뤘다. 그러나 “시간을 벌었다”는 문장은 주어와 방향이 없으면 비어 있다. 영국은 재무장을 계속했지만 독일도 군사력과 전략위치를 바꾸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국경·요새·산업과 동맹의 선택지를 잃었다. 프랑스의 군사준비와 정치의지는 또 다른 시간표를 가졌다.

그 시간이 누구에게 순이익이었는지는 각국의 생산·배치·작전계획과 반사실을 같은 단위로 비교해야 한다. 현재 근거로는 결론을 잠글 수 없다. 안전한 문장은 이것뿐이다. 시간을 벌었다는 말은 누구의 어떤 능력이 상대보다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를 밝힐 때만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제3자의 자산

쿠바 위기에서도 쿠바와 터키는 초강대국 거래의 핵심 설계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가 비서명 4국 합의로 이전된 구조와 완전히 같지는 않다. 배제된 당사자, 다뤄진 자산, 참여시점, 이행협력의 필요를 따로 기록해야 한다.

제3자 배제가 있으면 모든 합의가 실패한다는 법칙은 없다. 다만 그것은 정당성, 현장 이행, 동맹 신뢰와 장기 지속성에 서로 다른 비용을 만들 수 있으므로 독립 평가항목이 되어야 한다.

쿠바는 타협이 평화를 만든다는 증거가 아니고, 뮌헨은 타협이 침략자를 반드시 대담하게 만든다는 자동 교훈이 아니다. 합의는 당일 무엇을 멈췄는지와 그 뒤 어떤 상태를 만들었는지 모두 평가해야 한다.

전쟁을 피한 합의와 미래 전쟁위험을 낮춘 합의는 같은 범주가 아니다.

이제 질문은 합의의 성패에서 더 긴 시간으로 이동한다. 총성이 멈춘 뒤 어떤 정치질서와 어떤 평화가 남는가.

PART 04

4부

총성이 멈춘 뒤 어떤 평화가 남는가

CHAPTER 12

보스니아 – 적과 같은 국가를 공동소유해야 할 때

내전은 국가 사이의 전쟁과 다른 종전 문제를 만든다. 싸움을 멈춘 뒤에도 적대집단이 같은 영토와 제도 안에서 살아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장을 내려놓는 행위는 군사적 선택인 동시에 미래 정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보스니아의 데이턴 협정은 이 문제를 한 문서로 해결하지 않았다. 대신 군사적 적대중지, 헌정질서, 인권, 민간 이행을 서로 다른 부속서에 나누어 설치했다. 평화협정이 전투를 끝내는 문서이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설계도가 된 사례다.

전쟁 중지와 국가 운영의 동시설계

군사 부속서는 적대행위 중지, 병력 재배치와 분리구역, 무장 민간집단 해산, 국제 이행군의 감시와 강제권한을 규정했다. 전투 중지를 당사자의 자발적 신뢰에만 맡기지 않았다.

헌법 부속서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두 구성단위(Entity)로 나누고 의회와 대통령, 권한배분을 정했다. 인권 부속서는 국제 인권기준과 집행기관을 두었고, 민간 이행 부속서는 기반시설·정치기관·인권·난민귀환·선거를 국제 조정의 대상으로 삼았다.

데이턴은 휴전 뒤 언젠가 국가를 만들겠다고 미룬 것이 아니다. 적대를 멈추는 규칙과 전후 국가를 운영하는 규칙을 같은 평화구조 안에 놓았다. 여기까지는 문서로 확인된다. 그 설계가 실제 장기효과를 얼마나 만들었는지는 다른 문제다.

집단의 포함과 개인의 권리

구성집단 중심의 권력배분은 서로를 군사적 적으로 대했던 집단이 국가기관을 공동 점유하게 하는 장치였다. 그러나 집단의 포함은 모든 개인의 동일한 정치자격과 같지 않았다. 특정 고위 공직의 피선거권이 보슈냐크(Bosniac)·크로아트·세르브와 영토 단위에 연결되면서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시민은 출마할 수 없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구조를 차별로 판단했고 집행 문제는 장기간 이어졌다.

이 사실은 두 문장을 구분하게 한다. “데이턴 헌정은 집단 공동소유 장치와 개인의 동등한 피선거권 사이에 긴장을 남겼다”는 말은 가능하다. “권력분점이 무장해제를 만들고 동시에

모든 장기 교착을 만들었다”는 말은 불가능하다. 전쟁 종결 때의 효과와 수십 년 뒤 정당체계·정책교착·정체성에 미친 효과는 다른 자료와 시간표를 요구한다.

외부 보증의 양면을 성급히 말하지 않기

보스니아 평화에는 국제 군사력과 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의 감시·조정이 내장됐다. 국제 안정화 병력의 권한은 오랜 기간 이어졌다. 외부 보증이 단지 협정 서명 순간의 장식이지 아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외부 보증이 국내 자립을 늦췄다는 인과는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 폭력 재발을 억제한 효과, 헌정 운영을 가능하게 한 효과, 국내 행위자가 외부 결정에 의존하게 된 효과를 나눠 보아야 한다. 외부 장치가 없었다면 어떤 경로가 가능했는지에 대한 반사실도 필요하다.

종전을 만든 제도가 장기 병목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매력적이다. 하지만 성공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병목이 되었다고 말하면 경제·사회분열·정당전략·국제환경이라는 경쟁설명이 사라진다. 현재 말할 수 있는 범위는 더 좁다. 종전제도의 단기 전쟁억제 효과와 장기 정치통합 효과는 같은 시점에 평가할 수 없다.

보스니아는 전쟁 부재, 기능하는 국가, 민주적 경쟁, 개인의 권리, 사회적 화해가 서로 다른 평가축임을 보여준다. 어느 하나의 부족이 다른 성과를 무효화하지도, 어느 하나의 성공이 나머지를 자동 보장하지도 않는다.

CHAPTER 13

스페인 – 전쟁이 재발하지 않으면 평화는 성공한 것인가

스페인 내전은 승자의 군사적 승리로 끝났다. 이후 같은 규모의 내전은 재발하지 않았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승자평화도 안정된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반례처럼 보인다. 그러나 “재내전 없음” 아래의 정치질서는 한 가지가 아니었다.

법으로 조직된 승자질서

1939년 정치적 책임법은 공화국과 인민전선에 연계된 정당·노조를 불법화하고 재산귀속과 제재를 규정했다. 1940년의 프리메이슨·공산주의 억압법은 가입과 선전을 범죄화하고 징역·몰수·공직배제·추방과 거주제한의 틀을 만들었다.

전쟁의 군사적 종결 뒤 패자는 동등한 경쟁자로 정치공동체에 복귀하지 못했다. 조직·사상·재산·공직 접근을 겨냥한 국가강제가 전후 통치의 일부였다. 따라서 내전 부재와 정치폭력 부재를 같은 사실로 쓸 수 없다.

하지만 억압이 내전 재발을 막았다는 인과까지 법문이 증명하지는 않는다. 반대세력의 조직력, 국제환경, 경제변화, 체제의 통치능력과 비교해야 한다. 억압의 존재는 확인되지만 억압의 독립효과는 보류해야 한다.

같은 비재발, 달라진 작동방식

1977년 사면법은 정치적 동기의 범죄와 노동·노조 관련 행위를 사면하고 권리회복의 경로를 열었다. 동시에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제약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 법은 화해나 망각이나 한쪽 이름으로만 부르기 어려운 전환기의 이중적 장치였다.

1978년 헌법은 자유·정의·평등·정치적 다원주의를 상위가치로 두고 국민주권과 정당활동을 제도화했다. 1939년 이후와 1978년 이후 모두 내전이 재발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를 떠받친 규칙은 같지 않았다. 앞의 질서는 승자의 강제와 배제를 중심으로 했고, 뒤의 질서는 적어도 법적으로 경쟁과 권리를 중심에 놓았다.

그러므로 스페인의 장기 비재발을 하나의 억압형 안정으로 묶을 수 없다. 한 사회 안에서라도 같은 결과와 결합하는 메커니즘은 바뀔 수 있다.

늦게 오는 정의와 기억

2007년 역사기억법은 내전과 독재 시기의 박해와 폭력을 겪은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실종자 소재와 발굴, 상징물, 기록 접근을 정책 대상으로 삼았다. 2022년 민주기억법은 진실·정의·배상·비재발을 명시하고 피해 범주와 국가의 의무를 확대했다.

이 법의 연대기는 과거책임과 기억이 민주화 직후 한 번에 마감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망각의 협약”을 당시 모두가 서명한 한 문서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치·사법·공론의 선택을 둘러싼 논쟁적 해석어다. 2007년 이전에 사회가 과거를 전혀 말하지 않았다는 전면적 침묵 서사도 정확하지 않다.

법이 제정됐다는 사실은 국가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하겠다고 규정했는지를 보여준다. 실제 발굴과 재판, 교육, 여론, 세대별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별도 증거가 필요하다. 기억의 활성화가 화해를 만들었는지, 오히려 갈등을 키웠는지도 한 방향으로 단정할 수 없다.

스페인이 보여주는 것은 기억이 늦게 돌아온다는 낭만적 이야기가 아니다. 군사적 종전, 강제적 비재발, 민주적 경쟁, 법적 권리, 책임과 기억이 서로 다른 시계로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CHAPTER 14

평화는 하나의 상태가 아니다

보스니아와 스페인은 거의 모든 조건이 다르다. 하나는 협상된 종전과 국제보증 아래 전후 국가를 다시 설계했다. 다른 하나는 승자의 군사적 종결 뒤 권위주의 질서를 거쳐 수십 년 후 민주적으로 전환했다. 두 사례를 성공과 실패의 같은 표에 넣을 수는 없다.

그런데 두 사례에는 한 가지 공통 질문이 가능하다. 전쟁이 다시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유·권리·국가기능·정의·화해를 추론할 수 있는가. 답은 아니다. 반대로 자유와 정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쟁 역제의 성과 자체를 지울 수도 없다.

평화는 적어도 여섯 층으로 기록해야 한다.

첫째, 무력 재발

조직된 전쟁이 다시 시작됐는가. 휴전선과 병력, 무장조직과 동원, 합의 위반을 본다. 이것은 평화의 가장 기초적인 성과다. 사람들이 더는 대규모 전투에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른 가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찮게 만들 수 없다.

그러나 비재발만으로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외부군의 억제, 승자국가의 탄압, 힘의 균형, 피로, 국제환경, 제도적 경쟁이 서로 다른 비중으로 작동할 수 있다.

둘째, 안전과 강제

누가 폭력을 억제하고 행사하는가. 군과 경찰은 누구에게 책임을 지는가. 외부군이 안전을 보증하는가. 무장해제는 어떻게 집행되는가. 반대세력을 침묵시키는 국가폭력이 존재하는가.

강제의 부재가 평화는 아니다. 모든 질서는 일정한 강제력을 필요로 한다. 중요한 것은 그 강제가 어떤 규칙 아래 누구에게 적용되고, 이익을 제기할 통로와 교체 가능성이 있는가이다.

셋째, 정치경쟁

전쟁의 패자와 소수자가 무기를 내려놓고도 제도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당활동, 권력교체, 집단대표와 개인권리를 본다. 집단을 헌정기관에 포함하는 것과 모든 개인에게 같은 시민권을 주는 것은 같지 않다.

넷째, 국가기능

법과 행정, 재정과 치안, 교육과 서비스가 실제로 작동하는가. 헌법과 부처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출발점이다.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지, 정책을 집행할 인력과 예산이 있는지, 외부지원이 줄어도 지속되는지를 따로 측정해야 한다.

다섯째, 정의와 책임

과거의 폭력과 피해를 누가 어떻게 인정하는가. 재판·사면·배상·진실조사·실종자 발굴 가운데 무엇이 가능하며 누가 배제되는가. 처벌이 곧 화해는 아니고, 사면이 곧 사회적 망각도 아니다. 당시의 생존과 민주전환을 가능하게 한 선택이 뒤의 정의 요구와 충돌할 수 있다.

여섯째, 기억과 화해

전쟁의 죽음과 패배를 어떤 언어로 기억하는가. 교육과 기념, 가족의 기억, 법과 공론에서 적의 분류가 어떻게 바뀌는가. 화해는 기억을 없애는 일이 아니다.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폭력 없이 경쟁하고 공동의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더 가깝다.

서로 다른 시계

여섯 층은 한 방향의 발전단계가 아니다. 보스니아에서는 한 협정이 군사·헌정·인권·민간 이행을 동시에 설계했지만 실제 이행속도는 달랐다. 스페인에서는 내전 비재발이 먼저 지속됐고, 민주적 경쟁과 기억정책은 수십 년의 시간차를 두고 바뀌었다.

한 층은 개선되고 다른 층은 후퇴할 수 있다. 국가기능이 강해지면서 정치경쟁이 약해질 수 있고, 정의 절차가 확대되면서 기억갈등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초기의 불안정한 타협이 폭력을 낮추고 뒤의 세대가 더 넓은 권리와 책임을 요구할 시간을 만들 수도 있다. 어느 방향도 자동법칙이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평가할 때는 반드시 기준과 시점을 함께 밝혀야 한다. 누구의 안전인가. 어느 기간의 비재발인가. 어떤 국가기능인가. 어떤 권리와 책임인가. 화해를 무엇으로 관찰했는가.

좋은 평화를 하나의 점수로 정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나쁜 평가법은 피할 수 있다. 휴전을 평화로, 제도 설치를 국가역량으로, 집단대표를 개인권리로, 침묵을 화해로 등치하지 않는 것이다.

전쟁 부재는 평화의 한 층일 뿐이며, 안정·자유·국가기능·정의·화해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는다.

EPILOGUE

에필로그

적과 다시 같은 세계에서 살 수 있는가

전쟁은 적을 제거하려는 충동을 낳는다. 상대가 사라지면 위협도 사라질 것처럼 보인다. 때로는 물리적 강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집단학살과 절멸의 위협 앞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능력을 파괴하는 일이 대화보다 먼저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전쟁은 적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 채 끝난다. 국경 너머의 국가, 같은 영토의 집단, 해체된 제국의 후계국, 어제의 반군과 패자가 미래에도 존재한다. 적대가 끝난다는 것은 상대가 선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의 행동을 규칙과 비용 안에서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뜻에 가깝다.

적을 이해한다는 말도 조심해야 한다. 그것은 동의나 용서가 아니다. 상대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어떤 손실을 견딜 수 있으며, 무엇을 배신으로 보고, 어떤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아는 일이다. 이해는 도덕적 승인이 아니라 잘못된 예측을 줄이는 능력이다.

베트남에서 미국과 북베트남, 남베트남은 같은 전쟁 안에서 다른 시간표와 종전을 가졌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전쟁을 시작한 행위자와 정권 일부가 사라졌다. 한국전쟁에서는 포로의 정치적 신분이 후반 휴전의 핵심쟁점이 됐다. 포클랜드와 걸프전쟁에서는 제한된 작전목표가 유지되었지만 분쟁과 전후질서는 남았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적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능력과 다음 국가를 운영하는 능력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었다. 독일과 일본은 정권교체와 점령이 언제나 실패한다는 결론을 막았다. 쿠바는 상대를 파괴하지 않고도 위기에서 물러날 수 있음을 보였지만 그 출구가 비밀조건과 제3자의 비용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뮌헨은 합의가 충실히 이행돼도 그 이행대상이 미래 안보를 악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보스니아와 스페인은 전쟁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한 문장 뒤에 서로 다른 정치적 세계가 놓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평화는 충성이 멈춘 날짜로 시작할 수 있지만 같은 날 완성되지는 않는다.

이 긴 비교가 하나의 처방을 주지는 않는다. 완전한 패배, 타협, 권력분점, 외부보증, 사면, 기억정책 가운데 어느 것도 언제나 옳은 해법이 아니다. 사례가 주는 것은 자동 교훈이 아니라 질문의 순서다.

왜 시작했는가.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누가 전쟁의 행위자가 되었고 누가 사라졌는가. 현재 다음 결정을 막는 문제는 무엇인가. 무엇을 확인하면 전투를 멈출 수 있는가. 누가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가. 군사적 정지 뒤 어떤 국가와 정치경쟁이 남는가. 시간이 지난 뒤 안전·권리·정의·기억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 질문을 끝까지 분리하면 전쟁의 비극이 단순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 그러나 그 복잡성은 회피가 아니다. 전쟁을 시작한 이유만 되풀이하며 현재의 병목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어느 문제는 이미 사라졌고 어느 문제는 전쟁 속에서 새로 중심이 되었는지를 아는 편이 종전에 가깝다.

전쟁의 가장 어려운 마지막 단계는 적을 모두 없애는 일이 아닐 수 있다. 적이 총을 내려놓고도 살아갈 수 있고, 다시 적이 되더라도 총이 아닌 규칙으로 경쟁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일일 수 있다.

싸움을 시작한 세상과 싸움을 끝내야 하는 세상은 같지 않을 수 있다. 평화의 일은 그 달라진 세상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APPENDIX A

장별 검증 상태

장	핵심 기능	현재 수준	출판 전 핵심 보장
프롤로그	질문의 입구	L1-L2 / HOLD	1997 하노이 회담 직접 기록
1장	원인의 층	L1 / ESTABLISHED	대표 이론·문화인류학 논쟁의 표준 문헌
2장	구조·선택·우발	L0-L1	비교사례·의사결정 연구·반사실 경계
3장	승리의 사다리	L2 REFRAME	군사전략 표준경의·사례별 병렬표
4장	진입 이유와 출구	L3	남베트남·베트남어 자료, L4 번역·후주
5장	변화폭의 상한	FACT L2 / CAUSE L1	비서유럽 전선·전쟁목표 사학·1918 인과비중
6장	발발과 휴전장애	L2	북한·중국·한국 자료와 종전 경쟁설명
7장	제한적 하한 반례	L2	아르헨티나·이라크·쿠웨이트·UN 원문
8장	정권 제거→국가능력	FACT L2 / CAUSE L1	CPA 집행·반란, 아프간 2001-2021 시계열
9장	실패론의 반례	L1-L2	독일·일본 장기 비교와 외부안보 효과
10장	패배 없는 완화	L2 + CAUSE L1	쿠바·터키 관점, 냉전 종결 원인순위
11장	합의 뒤 위험	L2 + COUNTERFACTUAL L1	원한의 군사시간·제3자 장기비용
12장	협상된 포함	STRUCTURE L2 / EFFECT L1	보스니아의 장기 국가기능·권리·통합
13장	메커니즘 전환	LAW L2 / SOCIAL EFFECT L1	억압·폭력·사면·기억정책 집행 시계열
14장	평화의 여섯 층	SYNTHESIS L2 / CAUSE HOLD	앞 장의 미해결 인과를 결론으로 확대하지 않기
에필로그	규범적 출구	EDITORIAL HOLD	전 장 검증 뒤 최종 문장 확정

APPENDIX B

근거군과 후주 씨앗

B1. 이론과 방법

- Carl von Clausewitz, On War, 정치목적·전쟁형태·수단 관계.
- James D. Fearon, 전쟁의 합리주의적 설명: 정보·약속·분할 문제.
- Robert Powell, 협상이론과 권력 변화.
- Hein E. Goemans, 지도자·국내정치·전쟁종결.
- Elizabeth A. Stanley, 국내 권력연합과 종전경로.
- Charles Tilly, 전쟁과 국가형성.
- 신뢰 가능한 약속, 제한전쟁, 조직학습, 권력분점, 제3자 보증, 전환정의와 기억정치 연구군.

이 연구들은 프로젝트의 독창성 근거가 아니다. **동적 인과구성**은 이 설명들을 단계별 비교에 배열하는 작업절차다.

B2. 핵심 1차·공식 자료군

- 베트남: Johnson·Nixon 연설, FRUS Vietnam 문서군, 파리평화협정, 북베트남 당 문서 번역, 미 육군사.
- 제1차 세계대전: 오스트리아-헝가리 최후통첩·선전포고, 독일 9월 각서, 런던조약, 미국 참전연설, 러시아 평화포고, 브레스트-리토프스크, 14개조, 1918년 휴전문서.
- 한국전쟁: UN 결의 82·376(V), FRUS 1951-1953 휴전·포로·이승만 문서군, 1953년 휴전협정.
- 포클랜드·걸프전쟁: 영국 Hansard, UN 총회 37/9, Bush 연설, UN 안보리 결의 687과 후속 이행기구.
- 아프가니스탄·이라크: 본 협정, CPA Regulation 1·Order 1·2, GAO 국가·안보역량 평가.
- 독일·일본: 포츠담 원칙, 일본 점령 지휘문, 일본 헌법, 독일 기본법 관련 공식 기록.
- 쿠바·냉전·빈헨: 미·소 서신과 FRUS, 핫라인 협정, 부분핵실험금지조약, INF·Paris Charter·Lisbon Protocol, Munich Agreement와 1938-1939 외교문서.

- 보스니아: Dayton General Framework Agreement와 Annex 1-A·4·6·10, 유럽인권재판소 관련 판결·집행기록.
- 스페인: 1939·1940 억압법, 1977 사면법, 1978 헌법, 2007 역사기억법, 2022 민주기억법.

이 목록은 완성 참고문헌이 아니다. 원문 재독·정확한 위치·번역·권리·서지형식 통일 뒤 L4 후주로 전환한다.

APPENDIX C

출판 잠금 전 남은 일

1. 최초 공유대화 전체 RAW를 회수하거나 영구 미회수로 명시한다.
2. 프롤로그의 1997년 하노이 회담 직접 기록을 확보한다.
3. 미국·영국 공식자료에 치우친 장에 상대 행위자의 동시대 원자료를 보강한다.
4. CH05-13의 사실 L2와 인과 L0-L1을 문장별 후주에서 구분한다.
5. CH04의 남베트남·베트남어 자료와 모든 직접인용 번역을 재검수한다.
6. 장별 중복을 한 차례 더 줄이고 사례·개념·평화 파트의 분량을 최종 조정한다.
7. 지도·도표·사진을 사용할 경우 사용권과 출처를 별도 감사한다.
8. 최종 제목·부제·저자 및 AI 공동표기·출판사 제출방식을 OWNER GATE에서 결정한다.
9. 전체 후주·참고문헌을 한 형식으로 통일한다.
10. 완성 원고 PDF의 전수 교정 뒤에만 WEB·BLOG·SOCIAL·VIDEO 파생을 허용한다.

CANONICAL LOCK

MASTER LOCK

BOOK CORE

전쟁을 일으킨 문제는 전쟁을 끝내는 문제와 같을 필요는 없다.

BOOK CENTER

이 책의 중심은 한 전쟁이 아니라 원인→수행, 수행→종전, 승리→질서, 합의→미래 위험, 무전쟁→평화의 질이라는 다섯 경계 이동이다.

BOOK MOVEMENT

발발 → 수행 → 군사적 종전 → 초기 안정화 → 정치제도화 → 국가기능 → 권리와 책임 → 기억의 재협상

BOOK SAFETY

비유 ≠ 동일성. 군사승리 ≠ 정치승리. 휴전 ≠ 전후질서. 전쟁 부재 ≠ 좋은 평화. 안정 ≠ 자유 ≠ 정의 ≠ 화해.

VERSION LOCK

1. 본 문서는 프롤로그·전체 14장·에필로그가 연결된 최초의 전권 산문 마스터다.
2. BOOK MASTER v0.3과 CLAIM-EVIDENCE MAP v0.2의 주장 범위를 넘는 문장은 의도적으로 약화했다.
3. 기존 MASTER·DOSSIER·CH04 초고를 삭제하거나 덮어쓰지 않는다.
4. 본 버전은 RESEARCH-LOCKED이며 PUBLICATION-LOCKED가 아니다.
5. 새 사실과 새 해석은 주장 ID·SOURCE DOSSIER·경쟁설명 감사를 거친 뒤에만 다음 버전에 병합한다.
6. 파생본은 출판검증과 OWNER GATE 전에는 만들지 않는다.
 - CANONICAL STATUS: BOOK PROSE MASTER v0.1 LOCKED
 - RESEARCH STATUS: FULL-BOOK PROSE COMPLETE / SOURCE GAPS DECLARED
 - EDIT STATUS: WHOLE-BOOK FIRST PASS COMPLETE / COPYEDIT PENDING
 - PUBLICATION STATUS: HOLD
 - NEXT: SOURCE & FOOTNOTE PASS v0.1 → BOOK PROSE MASTER v0.2